정당 및 사회단체 중앙위원회들의 합동총회 결과에 관한 조회보고

시티코프 상장 동무 귀하
제25군 사령관 코로트코프 중장 동무 귀하

금년 7월 1~3일 북조선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중앙위원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합동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정당과 사회단체의 지도자 혹은 그 대리들이 보고자로 나서 공동위원회 문제에 대한 각자의 답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답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그것에 찬동하였으며, 그 답안들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보고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김일성이 장차 수립될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민주당 함경남도 도당위원당 리남영은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연설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총회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들의 목표와 지향을 온전히 표현하는 답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당위원회의 확대 총회는 답안들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답안들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안들에는 우리 당의 요구만이 아니라 전 조선인민의 요구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 지방권력기구의 구조는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통일정부가 수립될 때 이 권력 형태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원들 모두가 투쟁해야 합니다. 김일성의 보고를 널리 선전해야 하며 김일성을 정부 수반의 자리에 올려놔야 합니다."

바로 이 총회에서 민주당 평안남도 도당위원장 홍명희는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철저한 민주적 개혁이 실행되었으며, 개혁은 일제지배의 유산 청산작업을 가속화했습니다. 조선의 남녘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적 승리는 조선 전역의 민주주의의 기반인 것입니다. 공동위원회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답안은 이 모든 근본적 변화를 체현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기초 위에 단일정부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민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자협회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토론에 참여했던 평양대학 조교 김정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 국가는 민주인민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반동분자들 역시 공화국에 관해 말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공화국, 인민공화국입니다."

연합노조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최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밝힌 답안은 김일성의 보고 내용과 일치합니다. 본인은 이 답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민은 조선 국가가 김일성의 보고 및 우리의 답안에서 제시된 길을 따라 발전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협의를 위해 선출된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답안을 전력으로 옹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

---

* 미소공위에 대한 북한 각 정당의 결정서들은 다음을 참고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7 Ⅱ, Box 613,『쏘米共同委員會에 關한 諸般 資料集(增補版)』,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 中央委員會 書記局 編輯, 1947, pp. 158~218.

일성이 임시민주정부의 수반이 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공동위원회와의 협의를 준비하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1947년도 인민경제복구발전의 통제숫자 완수를 위한 투쟁이 우리의 기본 과제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부당수 홍기주는 민주당의 전(前)지도자인 반동분자 조만식의 정체를 폭로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조만식이 미국 사절단장 브라운과 대화한 내용 및 조만식이 남녘, 특히 여운형과 연락관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 다음 홍기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만식 - 이 자는 친일파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아침 9시 일본이 항복한 후에 일본 [도]지사는 평양에서 조만식을 자신에게 불러서 그에게 평양에 남아 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일본의 노선을 실행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조만식은 기꺼이 동의했으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발하여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 서울에서는 아베 일본총독이 자신의 인장을 여운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운형과 조만식은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지금 여운형은 어중간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 역시 반동적 정책입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자들과는 단호하게 투쟁해야 하며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개신교협회를 제외한 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중앙위원회들이 참여하여 개최된 총회들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전적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답안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열성자 집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보고에서 제기된 요구들과 완전히 부합하게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개신교협회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답안을 논의할 때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조선 정부의 최고지도자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으나 결국 수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수상이 행정부 수반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각료회의 의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이는 소련의 행정부 수반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지도자(Правитель)”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종교 담당 부서의 설립 필요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었습니다. 일부는 국가라면 당연히 종교들 문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다른 일부는 조선에 종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국가 부서의 설립이 종교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 결과, 종교 담당 부서는 설립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 각 부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즉 ‘성(ministry)’이라 할 것인가 아니면 ‘부(отдел)’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성’이 다른 나라들에도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그 부서들 이름은 ‘성’이 아니라 ‘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지문제 역시 긴 토론을 거쳤습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지주소유 토지는 몰수되어 그 경작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개혁 당시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은 자신의 예전 지역들에서 토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 농기구, 견인력은 지주들 수중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국가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공화국을 예상한다면 무엇 때문에 “인민의”라는 말을 붙이느냐는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공동위원회 문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조선이 민주인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국가체계 문제에 대한 답안은 조선이 13개 도(道)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도에는 도지사 아래 인민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군에는 군수를 필두로 인민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면과 읍에는 인민위원회가 아니라 면장이나 읍장(러시아로 번역이 되지 않음)이 있어야 합니다.

명칭 문제와 관련된 주(注)에는 조선 황제 치하에 국가적 명칭으로 있었던 것들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토지와 산림 문제에 대해서 답안에 적힌 내용은 5정보가 넘는 지주소유 토지는 압수되어 되어 토지를 갖지 못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지 않기에 개혁의 결과 토지를 압수당한 지주들에게 정부는 "그들의 생존 방법"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5정보가 초과되는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직접 경작하는 지주들에게는 가장 좋은 토지를 배제한 가운데 5정보 미만의 토지를 남겨줍니다.

산림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도들의 답안에는 큰 신림은 국가로 귀속되고 작은 산림은 저주지에 따라 개별 공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중앙위원회들이 참여하여 개최된 총회들은 열띤 분위기 속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문제에 대한 답안은 김일성이 보고에서 제기하여 만장일치로 승인된 요구들에 부합합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노선에 대해서 금년 7월 3일 개신교협회 중앙위원회 대표자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공동위원회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답안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지금 그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소련민정국장 대리
대좌 이그나티예프

사본 총 4부
사본1은 시티코프 장군에게
사본2는 코로트코프 장군에게
사본3은 제7과로
사본4는 업무용

1947년 7월 [?]일